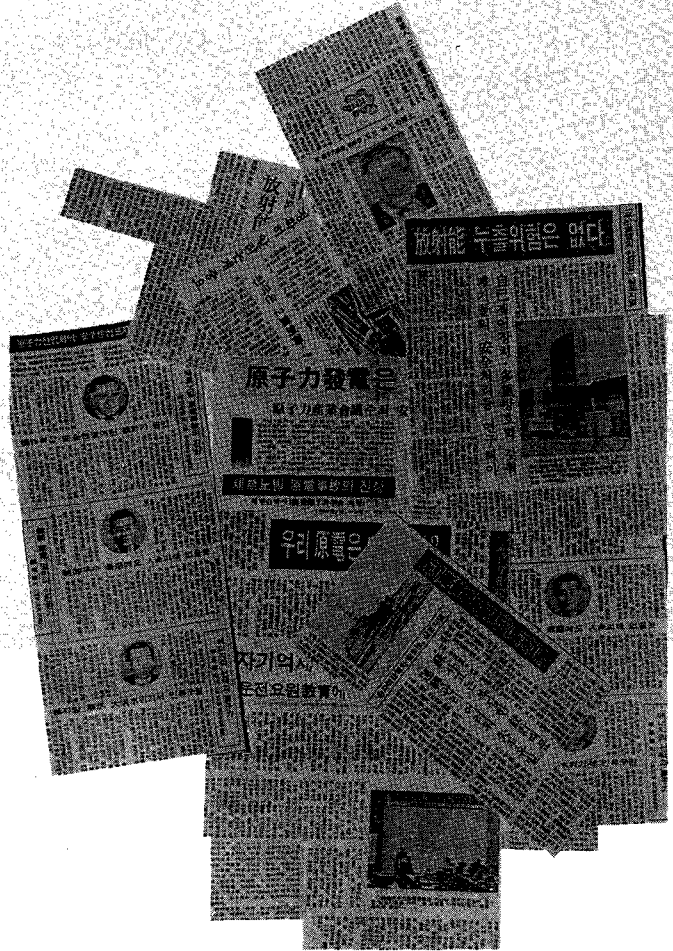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과  
입지선정

# 國民 弘報對策



정 준 극  
한국원자력연구소 원자력홍보부장



**일**마전 일본원자력산업신문을 보니 눈에 선뜻 들어오는 기사가 있었다. 제목을 굳이 번역해 보면 「해봤자 PA, 그래도 PA」라고나 할까? 부연하면 「(아무리) 해봤자(별 볼 일 없는)PA, (그나마) 그래도(않할 수 없는) PA」가 제목에 함축된 내용이다.

원자력발전, 또는 방사성폐기물 문제만 나오면 곧 이어 「국민의 이해를 얻어야...」라는 말이 약방문처럼 뒤따른다. 계속하여 「홍보가 부족해서...」라는 말이 쉽게 따라 나오기 마련이다. 원자력산업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국민적 이해를 얻어야 하고, 그러자면 홍보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지

원자력의 안전성과 필요성을 알리는 각 일간지의 기사모음

극히 상식적인 논리이다. 바꾸어 말하여 원자력발전소 건설부지, 또는 방사성폐기물처분장 후보부지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중심적인 이유, 그것은 바로 국민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다는 충고 겸 저문의 말씀들이다.

## 「해봤자 PA, 그래도 PA」

원자력사업을 추진해야만 하는 입장에서는 말할 나위도 없이 국민 이해증진, 즉 원자력홍보가 매우 중요하다. 원자력사업의 사활

은 홍보 여하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그래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PA사업을 펼치게 되었던 것이다.

우리나라의 원자력 연혁은 올해로써 35년 남짓을 기록하고 있다. 돌이켜보면 우리나라 원자력 사업의 초창기에는 원자력 홍보를 생각할 여유도 없었다. 기술개발, 기술개발... 그리고 선진 외국의 새로 나온 기술보고서를 읽기에도 시간이 부족했었다. 더구나 근자에 이르기까지 군사정권 30년 동안 국민이해, 주민합의, 원자력PA와 같은 단어는 오히려 생소했던 세월이었다.

80년대 말은 우리나라의 원자력사업이 바야흐로 선진대열의 문턱에 겨우겨우 참여하려고 드라야 할 때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치, 사회적으로 온 나라에 기화된 이른바 민주화의 열기가 사뭇 고개를 들기 시작했던 시기이기도 했다. 따라서 그동안 지하에 은거하던 재야의 목소리가 당연히 돈을 높여가게 되었고 이들 재야에게는 정치, 이념적 투쟁의 도구로써 원자력이 더할 수 없이 괜찮은 메뉴 중의 하나가 되었던 것이다.

때마침 일반국민 사이에서는 지나친 공업화 드라이빙 정책 때문에 면산 한 번 쳐다보지도 못했던 환경보호 문제가 슬며시 고개를 들기 시작하였고 이들 재야는 원자력을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싸잡아 공격함으로써 몇 모르는 일부 일반국민의 호응을 쉽

리 얻을 수 있었다.

원자력은 자연 민주화 열기에 휩싸인 반체제 재야운동의 좋은 공격목표가 되었다. 다국적 기업의 횡포, 원전도입을 둘러싼 비리 파문, 민중을 외면한 안정성... 이런 것들은 반핵주장의 단골 메뉴였으며 여기에 원자력발전과 핵무기를 교묘히 용접하여 일반국민을 점점 더 깊은 공포의 언저리로 끌고 들어갔다.

반핵은 심지어 조국통일도 원자력발전 때문에 안된다는 억지 논리를 내세우기도 했으니 국가에너지 자립을 위하여 원자력발전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아닌 밤에 홍두깨 격으로 반핵의 공격을 받을 수 밖에 없었던 터였고 어떤 수로든지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하여 정부와 원자력계는 국민홍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아울러 각양 PA 사업을 서두르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편승하여서 누구나 전문가인 척하면서 수 없는 아이디어를 내놓으며 쉽사리 주장하는 말은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이었고, 한편 원자력사업 추진에 약간의 이의를 제기하는 방편으로써 「아직도 홍보가 덜 돼서...」라는 표현을 수시로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원자력사업을 추진해야만 하는 입장에서는 말할 나위도 없이 국민홍보가 매우 중요하다. 사업의 사활이 바로 국민홍보 여하에 결

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옛날 같으면 생각도 못할 여러가지 PA사업이 추진되었다. 연구원들이 연구실을 뛰쳐나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반국민들에게 원자력사업에 대한 이해를 조금이라도 높히려고 무던히도 노력했다. 과학기술처의 장관도, 원자력연구소의 소장도, 그리고 원로 과학자들도 거리로 나와 「원자력 바로알기」 캠페인을 펼쳤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부의 과학기술장관, 또 원자력연구소의 소장이 그리고 원로 과학자들이 거리에서 팜플렛을 나눠주고 설명회를 가지는 등 할 수 있는 대로 노력을 기울인 경우는 아마도 없었을 것이다. 말이 홍보이지 실제로 홍보만큼 어려운 일도 없을 것이다.

「빈독에 물 붓기」라는 표현은 오히려 희망적일 수가 있다. 빈독이라도 있으니 어느 때 가서는 독이 채워질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괴롭게도 우리의 원자력 홍보는 「남의 다리 굵기」가 일수였고 「떡 주고도 뺨 맞는」 경우 역시 적지않은 형편이었다. 그래도 안할 수 없는 것이 홍보. 그나마도 홍보를 안하면 「홍보가 부족해서...」라는 소리를 더 듣게 될 터이고 실제로 사업추진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해봤자 PA, 그래도 PA」라는 표현은 바로 우리 원자력 홍보의 단면을 반영해 준 것 같아서 씁쓸한 심정이다.

油斷大敵

1989년 경북 영덕 일원에 대한 처분장 부지선정 첫 시도가 실패한 이래 국민이해증진을 위한 PA의 필요성이 상당히 부각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사실 그 때만 해도 「우물안 개구리 식」이었다. 반핵을 너무 몰랐었다. 1988년 초 민주화 선언과 함께 때를 맞추어 튀어나온 이른바 영광 무늬아 파동 때만 하더라도 반핵단체를 실감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었다. 그러다가 1990년 말 안면도 사태 이후에서야 비로소 재야 반핵의 위력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나 비록 안면도 사태라는 뜨거운 경험을 했지만 반핵의 실체를 본질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응코자 하는 노력과 실력은 빈손이었다.

1991년 말 서울대 등의 조사연구 결과 6개 후보지역이 발표되었다. 곧 이어 각 지역에서 당연히 격렬한 반대 투쟁이 솟구쳐 일어났다. 주도적 반핵단체들(특히 공추련)의 직접·간접적 지원을 받아 거의 모든 지역에서 조직적이고도 감정적인 반대투쟁이 펼쳐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폐기물사업에 전담하고 있는 원자력환경관리센터는 비로소 반핵의 실체를 어렵 뜻이나마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닐 수 없었으나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솔직히

처음에는 속수무책이었다.

반핵단체의 행태는 참으로 필설로 옮기기조차 힘든 것이었다. 주민들간의 갈등조정, 명예훼손, 공공질서 파괴, 허위 양심선언 조장 등등 그야말로 물지각한 행동의 연속이었다.

그뿐 아니다. 터무니 없는 억지 주장과 선전으로 지역주민들을 기만하고 선동하여 오도하는 경우가 비밀비재 했다.

「선전은 거짓일수록 극렬하다」는 말이 있다. 반핵단체의 원자력 반대 주장은 그야말로 비과학적인 억지가 가중된 것이었기 때문에 더욱 극렬했다. 반핵주장의 예를 들면 「폐기물처분장 주변마을은 풀 한 포기 자라지 않는 황폐한 지역이 된다」 「폐기물처분장을 중심으로 반경 수십km 이내에는 사람은 물론, 동식물도 살 수 없다」 「방사성폐기물(반핵은 결코 방사성폐기물이라는 정식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대신 핵폐기물 이라고 함)은 폭탄처럼 폭발한다」 「처분장 인근 바다는 죽음의 바다가 된다」 「처분장 주변마을에 사는 사람은 기형아를 낳게

되며 기형아축도 생긴다」 등 이런 식이다.

반핵측은 이와 같은 비과학적인 억지 주장에 결들여서 정부나 연구소의 도덕성을 공격하는 데에 열성을 다하는 전략을 구사하기 시작했다. 폐기물사업과 관련하여 정부는 밀실행정을 일삼기 일쑤이며 연구소는 정부의 하수인으로서 주민 회유를 위한 금품매수 등 비도덕적 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식이다.

이 모든 주장과 행동이 원자력을 정치공세의 도구로 이용하고자 하는 재야 반핵의 치밀한 전략에서 비롯되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반핵측은 반핵운동이야말로 반핵운동이며 반미운동이고, 또한 조국통일을 위한 운동이라고 서슴없이 주장하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이들의 논리는 아주 간단하다.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했던 연료로 핵무기의 원료가 되는 플루토늄을 마음먹은대로 뽑아 낼 수 있기 때문에 원전=핵폭탄이므로 원자력발전을 반대한다는 것이다.(사용후연료를 재처리하여 뽑



국내 각계의 인사를 초청 원자력산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해보는 워크샵

아 낸 플로토늄은 핵폭탄으로 쓸 수가 없다. 그런 폭탄을 만들 바보는 없다. 따라서 반핵측의 주장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다시 말하여 이들의 주장은 한국의 원전으로 핵폭탄을 만들 수 있으므로 이것이야말로 조국의 통일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라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대하여 우리의 대응설명은 멀리 갈 필요도 없이 동아일보 93년 7월 6일자 남시욱(南時郁) 상무이사와의 「동아시아론」 기사에서 극명하게 볼 수 있다. 「이상한 현상은 얼마 전까지 우리 국내에서는 원자력 발전소 하나를 지으려 해도 격렬한 반대시위가 일어났었는데 휴전선 바로 너머에서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지금 국제 사회에서 시끄러우면서도 우리의 반핵운동가들과 환경운동가들은 침묵을 지키는 집이다.」

일본 금언에 「油斷大敵」이라는 말이 있다. 언제나 조심 조심, 만반태세와 함께 방심은 금물이라는 뜻이다. 원자력 PA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된다.

### 공개성, 투명성, 정직성

원자력환경관리센터가 폐기물 처분장 부지확보와 관련하여 일반 국민, 특히 지역주민에게 전달하고자하는 메시지는 「안전성」뿐만 아니라 시설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중심이 되고 있다. 이러한 메시지

전달에는 「공개성」과 「투명성」, 그리고 「정직성」이라는 개념이 전체를 이루고 있다.

「안전성」에 대하여는 지금까지도 일각에서 연구소가 안전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으며 오히려 문제의 핵심은 도외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하고 있으나 그래도 국민이해 사업에서 안전성을 소홀히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만일 안전성을 제쳐놓고 다른 뗏지만 전달한다면 「봐라! 안전성에는 자신이 없으므로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폐기물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도 안전성과 관련한 메시지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쨌거나 그 결과 근자에 이르러서는 안전성 시비 자체가 그다지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는 않은 것 같다. 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은 결코 위험한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일반국민들 사이에서 뿌리박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원자력환경관리센터가 수 많은 지역주민을 연구소로 초청하여 실제로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과 임시저장시설을 직접 견학하도록 하고 이런 시설에서 수십년을 근무하고 있는 연구원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게 전환시킨 것도 큰 기여를 하였다.

또 사회여론 주도층, 특히 언론인을 외국 처분시설을 취재, 견학하도록 한 것도 안전성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크게 기여한 것

중의 하나였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실제로 처분장을 보고 주변에 사는 마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던 인사들은 「과연 폐기물처분장의 안전성은 걱정할 것이 못되는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

원자력환경관리센터는 외국 처분장 현황과 지역 상황을 「이런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의 비디오로 만들어 각급 학교, 정부기관, 지역단체, 언론기관 등에 배포하였다. 이것 역시 안전성을 이해하기 위한 긍정적 측면을 많이 제공해 준 것이었다.

이렇듯 안전성 논란은 별무소득이므로 반대투쟁 쪽에서는 안전성이나 기술적인 문제로부터 방향전환을 하여 도덕성이나 정치성 이슈를 내걸게 되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있다. 반핵측이 도덕성이나 정치적 공약을 위해 억지주장을 펼치고 있으므로 일반국민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는 정직성과 공개성을 내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반핵측의 주장이 지극히 어불성설이며 조작 위주인 점이 있어서(예, 서산 서류 탈취사건:92년 5월 반투위측은 존재하지도 않는 음식점 이름을 공표하면서 이곳에서 연구소가 주민들을 회유하기 위해 향응을 베풀었다고 주장했음) 이에 대응하여 「눈에는 눈」 식으로 반투위측의 도덕성을 파헤쳐 여론화시키자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일일이 대응하다 보면 오히려

연구소측이 초라해지고 또 의외로 신뢰성이 추락될 수도 있으므로 자제하는 자세를 견지하기로 했다.

오히려 폐기물 시설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호소하여 공감을 얻도록 하는 것이 정도(正道)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 필요하고 시급하다

「필요성」을 설명하는 중에 「원자력으로 혜택을 받기는 하였으나 부담은 싫다」는 발상은 신한국 창조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마땅치 않음을 지적하고 싶다. 아울러 「방사성폐기물은 우리가 원자력으로 수 많은 혜택을 받는 데 따르는 최소한의 부담일 뿐」임을 강조하고 있다. 고통분담의 논리까지도 등장시키고 있다. 때문에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이른바 「중간의 40%」에게는 괜찮은 반응을 얻고 있는 메시지였다.

「시급성」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에는 그 내용이 복잡하여서 공감을 얻기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일각에서는 처분장을 당장 건설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내세우는 통에 좀 더 어려울 경우가 있다. 간단히 말해서 발전소 임시창고에 몇년간을 그냥 두어도 관계없다는 주장이 바로 그것이다.

임시창고가 부족하면 더 확장하면 되고..., 그러니 지금처럼 주민반대가 극심하고 반핵단체의 아우성이 극렬한 시점에서 공연

히 굵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어디 있느냐는 논리이다. 좀 기다렸다가 사회가 안정되고 지역이 기주의와 님비 사고방식이 수그러지고 나면 그때 가서 처분장을 구하는 것이 어떠한가였다. 더구나 처분장 때문에 반핵단체 및 전국 각 지역 반투위의 행동이 계속 활발해진다면 공연히 다른 사업계획, 즉 원전부지 확보계획은 물론이거니와 현재 가동중인 원전까지도 도매금으로 공격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내세웠다.

다른 원자력사업, 특히 원전부지 확보사업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주장은 옳은 것이다. 다만 방향이 다를 뿐이다. 국민들이 볼 때에 처분장부지 하나 확보하지 못하고 몇년째 질질 끌고 있는 실력이라면 원전부지는 커녕 다른 시설의 부지, 예컨대 원전연료 공장부지는 물론 화력발전이나 수력발전부지 조차 구하기가 어려울 터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무슨 일이든지 차근차근, 첫번 성공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처분장부지 확보가 성공해야 원전부지 확보도 순탄해질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임시창고를 증설하면 만사해결이라는 발상은 반핵측에 오히려 구실만 던져주는 것이 될 수 있다. 고리의 임시 저장창고 하나 증설하는 데에도 주민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었다. 시간도 3년이나 걸렸다. 기왕에 반대에 부딪치려면 본가(本家) 건설문제 가지고 부딪치는 것이 효과적이다. 「매도 먼저 맞는 것

이 좋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셋집 건설 문제만 가지고 자꾸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은 시간소비, 에너지소비, 자금소비일 뿐이다.

예산문제만 해도 그렇다. 어차피 영구처분장을 건설해야 한다면 임시저장시설은 중복 투자이며 예산낭비일 뿐이다. 또 자꾸 시기만 늦추다 보면 나중에 지역 개발사업 등에 들어가는 예산도 눈덩이가 될 수 있는 일이다. 따라서 「폐기물부지 선정 지연→원전부지 선정 지연→전력공급차질→산업활동 후퇴 및 국민생활수준 저하」라는 등식이 성립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이 「시급성」에 대한 PA 메시지로 방향잡고 있다.

### 개인 이기주의의 팽배

지역지원 처분장과 관련, 대다수 지역 주민의 관심은 개인보상과 지역개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안면도가 처분장 부지로 논란의 회오리바람 속에 있을 때 반투위의 주도적 인사들은 한편으로 극심한 반대 활동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을 찾기에 급급했었다.

예를 들어 반투위의 어떤 사람은 다 낡아빠진 어선을 그럴듯하게 보여 보상받겠다는 심산에서 급히 페인트칠 하기에 바빴다. 또 어떤 사람은 불법적으로 가두리 양식장을 설치해 놓고 나중에 자

기 소유인 것처럼 하여 보상을 받으려고 노력했었다. 자기 집의 못 쓰는 가마솥까지도 새 것으로 쳐서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 간수해야 한다고 법쩍 떨었던 주민들도 상당히 많았다. 거의 모두들 이런 식이었다.

부지로 선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소득증대사업, 공공사업, 육영사업 등 지역지원 사업을 펼치겠노라고 설명하면 극히 일부 유지들은 수긍하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실제로 대다수 주민들은 이러한 제안에 야광긱하지 않는다. 그것이 현실인 것 같다. 개인적으로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는 것은 절대 환영이지만 마을전체를 위한 공익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것도 좋긴 좋은데」 하면서 듣는 등 마는 등 한다.

지역지원사업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유념해야 할 사항은 상대적인 불이익에 대한 것이다. 해당 지역만 잔뜩 지원을 받고, 그 둘레에 있는 지역은 조금밖에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또는 아예 지원이 없으면 이를 불이익으로 간주하는 것이 실정이다. 다른 사람은 1백의 혜택을 받았는데 자기는 50의 혜택밖에 받지 못했으면 50을 불이익 본다고 믿는다. 그래서 억울하다는 생각에 더 극성으로 반대활동의 선봉에 선다.

지역주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역시 지역지원사업이다. 따라서 지역홍보활동의 주안점도 결국 지역지원사업에 두게 된다. 그러나 이렇듯 관념과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지역지원 PA」 활동은 난관에 부딪치기가 일쑤이다. 아직도 사회전반에 만연되어 있는 개인이기주의, 그리고 물질만능사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열기가 식어져야 한다. 「국가이익 우선」이라는 가치관이 일반국민들 사이에 뿌리박혀야 한다. 「개인보다는 마을」이라는 관념이 주민들 사이에 반듯하게 정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가치관을 갖도록 인도(引道)하는 것이 지역홍보 활동의 주안점이다.

일본 로카쇼무라 주민인 니혼야나기 여사가 「처분장시설이 약간 불안하게도 생각되지만 정부가 하는 일이므로 안전성에 대하여 걱정하지 않는다. 우리는 개인보다는 마을 전체를 더 생각한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여러가지를 시사해 주는 것이다.

### 지역개발사업, 지역지원 사업

물론 어떤 경우 지역의 촌로(村老)에게 국가사업이 어떻고 지역발전이 어떻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어도 오불관언일 수가 있다. 그 양반의 관심은 오로지 선조의 묘소가 있는 내 땅이 훼손되면 안된다는 것과 자손들은 무병장수하고 부귀영달해야 한다는 데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그 양반에게 반핵선생님들이 「핵폐기장이 들어서면 자손만대 기형불구가 생길 것이며 조상님들도 묘지에서 나와 괴롭게 방황할 것이다」(공추런 발간 「생존과 평화」

제 16호, 91년 12월호 내용 중에서도)라고 선전한다면 어떤 가치관을 가질지는 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독일의 유명한 사회심리학자 마슬로우 교수의 피라밋을 생각해 보면 금방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주민에 대하여는 우리도 생존권 문제와 생물학적 요건을 충족시켜주는 메시지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는 안전성이나, 사회적 지위 또는 생활수준 향상만을 외치거나 앉았는지를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처분장이 들어서는 지역에 대하여는 지역 발전을 위한 그야말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지역협력사업의 규모와 내용, 방법 등에 대하여는 해당 군 및 주민대표와 우선 협의한 후 그 내용을 토대로 정부의 관계부처와 최종 협의하여 결정하게 된다. 현재 구상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은 지역개발사업과 지역지원사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지역개발사업이란 주민숙원사업을 말한다. 항만, 도로, 교량, 상·하수도 시설, 양식장, 관광단지개발 등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준다는 것이다. 안면도의 경우에는 대천-안면도간의 연육교까지 고려해 본 일이 있다. 안면도 남단과 육지를 연결하는 연육교야말로 주민 숙원사항이었다.

지역지원사업이란 현재 한전이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하여 시행

하고 있는 사업과 같은 내용으로 매년 지원하는 것이다. 공공사업으로서 마을회관이나 체육관 건설사업 등이 있고, 소득증대사업으로는 지역특산물 생산을 위한 새마을 공장을 건설해 주는 것이 있으며, 육영사업으로는 지역내 학교에 교육기자재 제공 및 장학금 지원 등이 있다.

### 유래없는 재정적 지원

이러한 각종 사업을 통하여 폐기물 관리사업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실질적으로 기여한다는 점을 명백히 보여주어야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과학기술처)는 지난 6월 10일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의 촉진 및 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고 입법예고 했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방사성폐기물관리 사업자는 처분장이 소재한 군지역 내 주민의 생산소득 증대사업, 교육문화 및 복지사업, 육영사업 및 사회간접자본 시설사업 등을 시행하고 주변 지역주민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해야 하며, 각종 지원사업의 결정과정에 지역주민을 참여시켜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사업수행을 위해 2001년까지 7천억원의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을 조성한다고 법안에 명시해 놓았다.

### 외국은 간접지원 방식

세계적으로 보면 저준위 폐기

물 영구처분장을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일본, 미국, 프랑스, 스웨덴, 영국, 스페인 뿐이다. 독일, 대만, 캐나다, 핀란드, 스위스 등은 아직 영구처분장 신세를 지지 않고 임시처분장을 활용하고 있다. 어쨌든 이들 나라 중에서 일본을 제외하고는 처분장 주변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나라가 한 곳도 없다. 처분장 주변 지역지원법이라는 것도 물론 없다. 일본은 예외라고 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도 사실 따져보면 우리의 개념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일본에는 이른바 전원 3법(電源三法)이란 것이 있어서 그 테두리 안에서 에너지 연구비도 쓰고 지역 숙원 사업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지역 주민들이 받는 직접적인 혜택은 전기요금의 인하이다. (필자는 여기에서 귀중한 지면을 소비하면서 일본의 전원3법 내용과 주민지역사업 내용을 줄줄 설명할 의향을 갖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주어진 제목이 지역지원사업에 대한 것이 아니라 원자력홍보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지역주민의 주머니에 직접 혜택을 주는 사업이 없으나 대신 간접지원 내용이 허다하다. 미국이 그렇고 프랑스가 그렇다. 영국의 드리그(Drigg) 처분장은 원래 군부대 소유의 땅이었고 또 셀라필드라고 하는 세계 유수의 원자력 단지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주민과의 문제가 거의 없다시피 한 곳이다. 주민들이 대부분 셀라필드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스웨덴도 별 걱정없다. 포스마크 처분장은 세계에서도 유래가 없는 해저 동굴 처분장이다. 따지고 보면 육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게 만들어졌다. 더구나 주변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숫자가 열 손가락으로 셀 정도여서 특별히 지역에 신경쓸 필요가 없는 형편이다. 스웨덴의 국토 넓이는 우리나라의 열배 정도나 된다. 반면 인구는 서울시 인구보다도 적은 860만명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 그 넓은 땅의 한 구석에, 그것도 육지와는 관련없는 바다속 처분장에 대하여 몇 명 안되는 주민들이 문제 삼을 이유가 별로 없을 수 밖에 없다. 그나마 주민의 상당수가 포스마크 원자력단지에서 일하는 직원들이니 우리나라처럼 지역 반투위 같은 것은 찾아 볼 수 없다.

프랑스 역시 아직도 넓은 땅을 갖고 있다. 프랑스는 영구처분장을 두 곳에 가지고 있다. 첫번째는 라아그(La Hague)라고 하는 세계적 원자력단지(재처리 시설)의 한 구석에 자리잡은 라 만슈(La Manche)처분장이다. 원래부터 재처리 공장이 거대하게 자리잡고 있는 곳이므로 한쪽 구석에 저준위 폐기물 처분장을 운영한다고 해서 말썽 생길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 더구나 프랑스는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원자력 모범생. 국민들은 드골 대통령의 「위대한 프랑스」 제창에 전적으로 동참하기 위해 원자력을 에너지원으로 선택

했고 따라서 반핵은 언제나 찬밥 신세가 아닐 수 없었다. 두번째 처분장은 로브(L'Aube)라는 곳이다.

미국은 현재 3개소에서 영구처분장을 운영하고 있다. 세 곳 모두 민간회사가 관리하고 있다. 저준위 폐기물 쪼은 국가에서 신경쓰지 않아도 민간회사가 책임지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때문이다.

이들 여러 나라가 처분장을 운영하면서 해당 지역에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특히 주민 각자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일은 언감생심이다. 개인적 보상의 개념에서 개인의 지갑속에 얼마씩의 돈을 집어 넣어준다는 것은 서로를 망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외국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지역지원사업에 대하여 첫째 절대로 주민 개개인에게 직접 지원금이 교부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둘째 몇몇 주민대표라는 사람들에게 지원금을 맡겨서 착복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고, 셋째 도대체 직접적인 지역지원사업을 원하는 대로 해 준다는 것은 제고해야 할 일이라고 당부를 하고 있다.

어쨌거나 지역지원사업에 관한 PA의 방향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우선 정말로 해당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발전하는 곳이 된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점은 지역주민들의 소망일 뿐만 아니라 정부와 연구소측의 간절한 바람이기도 하다.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시설

왜냐하면 처분장이 들어섬으로써 그 지역이 진정으로 발전하고 주민들이 수없는 혜택을 받는다는 것을 실증하여 보여주고 싶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함께 사는 지역사회」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해당부지에는 처분장과 함께 여러 연구시설도 건설하게 된다. 연구소의 인력이 7백명 이상이나 근무하게 된다. 가족을 포함한다면 수천명에 이르는 인구가 그 지역사회의 새로운 일원으로 함께 살게 된다.

따라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시설이며 지역주민과 함께 사는 시설임을 강조함으로써 일체감과 동질감을 조성하자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지역사회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숙원사업 해결+각종 지원사업) 간접적인 기여사업이 허다하다는 점을 내세우는 것이다. 각종 지방세 납부는 물론(심지어는 차량세까지도) 지역 내 상업을 부흥시킨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슈퍼마켓도 장사가 잘 될 터이고 주유소도 매상이 올라갈 것이며 이 밖에도 수많은 상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마을 살림이 풍요로워진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학교, 교회, 사찰, 호텔, 휴양시설 등등... 간접적인 발전이 전개될 것만은 분명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모든 것을 통털어서 사회경제적 영향(Socio-Economic Impact)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으며, 이 분야야 말로 PA전략의 주축을 이루어야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홍보관(또는 PR센터) 같은 것은 사회경제적 영향의 좋은 보기이다. 영국 셀라필드의 홍보관(Visitors' Center)에는 사시사철 찾아오는 방문객 때문에 여간 즐겁지가 않다. 관광철도도 새로 개설되었다. 주변 마을에 있는 문화재도 복원되어 연계관광의 효과를 보고 있다. 지역 오페라극장의 보수를 지원해 준 것도 간접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

프랑스의 로브처분장에 있는 홍보관은 마을 향토 문화관 겸 마을 공회당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이 홍보관 옆에 있는 구내식당은 음식이 괜찮다고 소문이 나서 주민들이 선망의 눈으로 보고 있다.

일본 로카쇼무라 PR센터 역시 마을 행사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전시를 매우 잘 해 놓아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이 PR센터를 즐겨 찾아오고 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면 어쨌든 돈 쓰는 일이 많이 생기기 마련이다. PR센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이득도 수없이 많다. 이상 몇가지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처분장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바는 의외로 대하다.

결국 주민과 함께 하는 시설, 주민을 위한 시설임을 강조하는 것이 왕도인 듯 싶다.

결국 주민과 함께 하는 시설, 주민을 위한 시설임을 강조하는 것이 왕도인 듯 싶다.